

'추미애 아들' 여론전 키우는 野...특임검사 실현은 '희박'

법사위원들, 秋 아들 '황제 복무 의혹' 잇단 폭로

김종인 "추 장관 놔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

특임검사는 요건 안 되고 특검은 巨興에 막힐듯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연일 폭로전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당 지도부는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비판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데는 병역 관련 문제가 전국민이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병역 회피나 복무 특혜는 교육 문제와 더불어 국민의 '역린'인데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정의·공정'을 다루는 수장인 만큼 도덕성과 관련한 국민의 정서상 잣대에서도 어긋나 여론을 움직이는데는 '태풍의 눈'과 같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비대위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언급하며 "추 장관의 엄마 찬스"

라며 "특혜성 황제 군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라 느낀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추 장관 아들의 병역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당시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대령의 증언에 의하면 추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자대배치부터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 등 지속적인 외압이 있었다고 한다"면서 "추 장관은 이런 의혹에 대해 특임검사를 임명하든지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김선동 사무총장도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다"라면서 "어느 병사가 휴가 복귀를 안하고 부대에서 오는 전화에 버젓이 '집이다'라고 답할 수 있는지, 어느 병사가 진단서, 소명서, 명령서가 누락된 채 21일 휴가 쓰고 또 연장하는지. 국군 장병들에게 여론조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는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가 맡을 것을 촉구했다. 특검도 동시에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은혜 대변인도 지난 5일 "검찰은 8개월째 수사를 망개고 있다.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특임 검사 임명을 요청한다"고 한 바 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이 휴가를 연장해달라는 압박을 넣은 추 장관 보좌관의 진술을 조서에서 삭제했다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여서 '추미애 사단'이 장악한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특임검사나 특검 모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대검찰청 훈령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데, 서씨는 특임검사 수사 대상이 아니다. 또 해당 건은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 시기에 있었던 일어서 요건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김종인(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임검사 수사 요구를 두고 "앞뒤가 안 맞다"고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별검사로 마찬가지로. 특별검사는 국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거여(巨興)가 버티고 있는 21대 국회에서는 특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은 향후 여론

전에 더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이날 '조국 사태'까지 소환하며 공정성 논란에 다시 한 번 불을 붙인 데다 법사위원들이 서씨와 관련된 군 관계자들의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민의힘의 여론전은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이낙연 "여야정 정례대화 다시 하자"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 "우분투 정신으로 지금 국난 극복하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 무대에서 우분투(ubuntu) 정신을 화두로 던지며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했다.

공통체 정신을 일컫는 우분투란 아프리카 반투족 말로 '내가 있으니 내가 있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분투의 정신으로 우리는 K방역을 성취했다.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며 "우분투의 마음으로 우리는 전쟁과 가난을 딛고 일어섰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고 IMF 외환위기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겨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런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는 지금의 국난도 극복할 것"이라며 "내 가족, 내 이웃과 누렸던 일상의 평화도 되찾을 것이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성공적으로 준비할 것"이라면서 우분투 정신을 코로나 위기 극복의 열쇠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향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적 합의를 이루자"고 야당에 손을 내밀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靑 "이재명 발언에 청와대가 대응할 사안 아냐"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비판

청와대는 7일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당정협의회 전달 정부 여당을 향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논란이 일 데 대해 "대응할 사안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고위당정협의회 전날인 6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적으며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강경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여론 내부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정치

인으로서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라고 하지만 어찌 됐든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존재감 부각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지사의 강경 발언에 청와대도 공식 언급을 삼긴 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둔 정쟁화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지사는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다. 이는 저의 변함없는 충성이다"라고 적었다.

뉴시스

소병철 의원 "국회의원보다 피해 주민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레갈, 법사위)은 최근 연이어 법사위에서 감사원장에게 한국수자원공사 및 환경부에 대해 이번 수해 원인인 방류량 조절 등 책임을 규명해줄 것을 감사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측이 국회에 방문설명을 하겠다고 하자 "국회에 와서 설명하기 전에 현장에 먼저 가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의 의견부터 청취하는 것이 먼저"

라면서 순천시의회부터 찾아가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 의원은 순천의 도·시의원들에게 수자원공사 측의 설명을 들어보고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등 시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최등호 영산강·섬진강 유역본부장 등은 최근 순천시의회를 방문해 이번 홍수피해와 관련한 현황을 청

취하고 그 경위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도·시의원들을 통해 피해지역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로 했다.

소병철 의원은 "수해가 발생한 다음 날인 10일 순천을 찾아 직접 살펴본 현장은 실로 처참했으며 그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수자원공사는 수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노력보다는 실책을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뒷받침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